

G-Welfare Weekly Report

경기복지재단 | 발행인 (박춘배) |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3층 | Tel. 031-267-9399 | www.ggwf.or.kr | 2015.12.16.

01

중앙정부 정책동향

1. 보건복지부 지역 사회보장지표 개발

01 주요 내용

- 보건복지부는 「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및 지역간 균형발전 지원체계 마련」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,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(15.12.11.)
- 복지사업의 확대와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면서, 지역 차원의 실질적인 복지정책 설계에 필요한 객관적 기준으로서의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의 필요성 증대
 - 『사회보장 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』의 개정 이후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보장 수준의 균등화 노력의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
 - 지역 간 사회보장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보장 수행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과 평가매뉴얼을 개발할 계획
- 지역사회보장지표는 10대 영역(아동 돌봄, 성인 돌봄, 보호·안전, 건강, 교육, 고용, 주거, 문화여가, 환경, 총괄(삶의 질 및 지역인프라))으로 구성
 - 지표는 기존 지자체·시스템 자료 및 공공기관 자료를 활용하거나, 신규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규 조사를 통해 개발
 -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을 사전에 발굴 및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사 자료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
 - 지표는 각 지자체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,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지역 간 격차 비교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
 - 또한 이용자의 선택권·만족도, 종사자의 권리, 주관적 삶의 질, 취약계층 취업현황 등의 지표는 관련 내용이 실질적인 정책설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

(2015.7.1. 시행, 이하 '사회보장 급여법')

02 경기도에의 시사점

-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보장지표는 특별시와 광역시, 그리고 도(道)의 특성이 다름에도 동일한 지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각 지표 측정 결과에 대한 수준을 달리 적용해야 함
- 각 지역의 사회보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 체계 개선 요구
 - 지방정부가 수행 중인 사회보장사업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역별 특별 지표 개발을 요구
 - 지표 측정 후 사회보장 수준이 낮은 항목이나 지역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회보장심의회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조항 마련 필요
- 경기도는 31개 시·군 간 복지수준의 차이를 보정하고 지역적 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으로 실효성 담보를 위한 균형발전센터 설치를 법개정 요구

2.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개발

01 주요 내용

-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1999년부터 진행된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그 동안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시설들의 격차의 완화와 업무의 상향 표준화에 기여하였음
 - 현행 평가는 평가인력의 편차, 지역특성을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게 되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수행하고 복지서비스 실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
- 경기복지재단은 사회복지관 평가지표로 4개 영역, 10개 세부영역, 24개 지표 개발

〈평가지표 개발의 주안점〉

- 지역 고유성을 살린 특화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
-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
- 평가부담을 최소화한 지표
- 결과 활용도가 높은 지표

- 지자체의 예산지원, 기관의 규모, 지역주민의 욕구, 시·군별 시책사업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
 - ※ 〈예〉 안산시: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, 세월호관련 가족지원사업 부천시: 복지동사업
- 사례관리, 서비스제공, 지역사회조직화 등 3대 기능으로 전환된 복지관의 조직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 지표를 포함
- 사회복지관이 가장 많고 특화사업을 진행 중인 부천시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
 - 부천시에서 실행중인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파악·분석하고,
 - 부천시 자체사업을 수행중인 사회복지관 자체평가 지표를 개발
 - 부천시 사회복지관이 관련된 자체사업의 체계와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

〈부천시 사회복지관 자체평가 지표〉

구분	영역	세부영역	배점
I	조직운영	시설과 환경/재정과 운영/인적자원관리	25점
II	프로그램	사례관리/서비스 제공/지역 특화사업	30점
III	지역사회관계	자원개발과 관리/이용자권리와 참여	20점
IV	복지동 전달체계 구축과 실천성과	복지동 사업/민관협력	25점

02 경기도에의 시사점

-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
 - 도내 시설들에 대한 평가를 경기도가 수행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지표를 개발하고, 더불어 시설들에서 생성·축적된 데이터 관리가 필요
- 시·군에서는 시설평가 결과를 민간위탁 심사에 반영하므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표 개발 및 객관적인 평가는 중요
- 또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경기도 조례안을 만들어 시군에 권고하고, 표준화된 평가 기준안 및 매뉴얼 등을 보급
 - 경기도내에 위탁시설들이 시·군과의 마찰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위·수탁 되고 지역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업무 표준화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임

02

사도/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

1.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

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경기도가 연정과제로 추진해 온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결과 '수용' 을 결정하고 도에 통보

- 전국의 산후조리원은 총 602개소이며 전체의 60% 이상이 수도권(경기·서울·인천)에 집중되어 있고 이용비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큼
 - 산후조리원은 경기 181개소, 서울 154개소, 인천 34개소 등 전체의 60%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하고, 지역별 평균 이용요금(2주 기준)은 경남 양산 675만원과 전북 김제 55만원으로, 가장 낮은 지역과 가장 높은 지역 간 12.3배의 편차 존재
 - 경기도내에서는 성남·용인·수원·성남이 밀집지역인 반면 의왕·과천·동두천·가평·연천 등 6곳은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으며, 도내 이용요금 격차도 5.5배로 분석

〈표 1〉 도내 산후조리원 개설 현황

경기도	수원	성남	부천	용인	안산	안양	평택	시흥	화성	광명
181	17	23	12	18	8	9	6	6	10	11
군포	광주	김포	이천	안성	오산	하남	의왕	여주	양평	과천
6	1	3	2	3	3	1	-	-	1	-
고양	남양주	의정부	파주	구리	양주	포천	동두천	가평	연천	
17	6	6	3	7	1	1	-	-	-	

* 2015년 6월 기준

단위 : 개소

- 산후조리원 이용 일반화와 함께 이용 비용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현재 전국 4개 지역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·운영되고 있으며, 경기도에서도 내년 설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
 - 12월 현재 전국 4곳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·운영 중이며 이들 조리원의 평균 이용비용은 169만원으로 민간시설 평균(221만원)보다 24%가량 낮음
 - 또한 일부 시·군에서는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에게 산후조리비용 일부를 지원함

〈표 2〉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비교

지역	수용규모	비용	개원시기	운영주체	지원내용
제주 서귀포	14실	154만원	13년 3월	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	50% : 저소득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유공자
충남 홍성	14실	180만원	13년 3월	홍성의료원	1인 75만원 별도 지원
서울 송파	27실	190만원	14년 2월	송파구시설관리공단	30% : 저소득 다자녀 20% : 장애인 유공자
전남 해남	10실	154만원	15월 9월	해남종합병원	70% : 저소득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
경기도	10~14실 (예정)	168만원 (예정)	16년 7월 (예정)	경기도의료원	50% : 저소득

2. 재단 행사 일정

기관/행사명	주요내용
제3차 복지경기포럼 '경기도 복지균형 발전기준 어떻게 만들 것인가?'	• 일 시 : 12. 22.(화) 15:30 ~ 18:00 • 장 소 : 경기복지재단 교육장(202호) • 대 상 : 각 복지 영역별로 의원, 학계 및 현장전문가, 도 및 시·군 공무원, 경기복지연대회의 구성원 등 80명 내외 ※ 문 의 : 재단 경영전략팀 ☎ 267-9399

03 FACT CHECK

2040년 1인당 사회복지비 부담은 최대 491만 원?

- 한국경제연구원(2015)은 복지지출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생산가능인구가 21.9% 감소하는 2040년의 생산가능인구 한 명이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용을 추계
 - 시·도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용 부담은 2040년까지 연평균 0.5%~1.7% 증가해 최소(경기도) 164만 원에서 최대(전남) 491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
- 그러나 재정추계의 기본가정인 인구전제, 거시경제변수, 제도변수 등과 사회보장비용 범주 선정 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

■ 체크 1)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변동가능성을 고려하였나?

- 최근 논의되고 있는 노인연령기준 상향과 정년연장을 고려하면 노인연령을 69세로 상향할 때 204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는 411만8천명(12.5%)이 증가함
- 출산율 증가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과소추정의 문제가 있음

■ 체크 2)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2016년 현재 가치로 2040년의 비용을 추계

■ 체크 3) 지방정부 세수 구조는 국가보조금과 자체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지방의 순수한 사회복지비용만을 고려한 것인가?

- 국가보조금과 국가사업을 제외하면 실제 시·도의 복지부담률은 제시된 것보다 낮을 것
- 해당 연구는 장래인구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전망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지출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지 못함
 - 한국보건사회연구원(2013)*은 현행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,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는 동일하게 적용한 결과 2040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2.6%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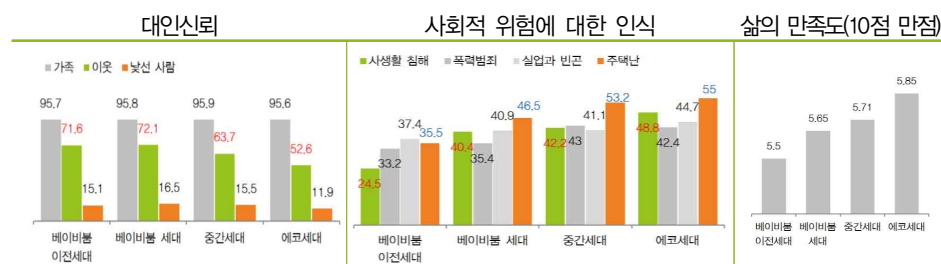
*한국경제연구원 (2015). 『인구 감소와 경제시스템 위기』 보고서.

*세종시는 제외

*한국보건사회연구원(2013). 『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』

04 통계로 보는 복지

세대별 사회의식 비교



자료: 통계청, 한국의 사회동향 2015

- 베이비붐 세대*와 그 자녀세대인 에코 세대의 사회인식을 살펴보면, 에코세대는 부모세대보다 대인신뢰의 반경범위가 좁고, 특히 이웃에 대한 신뢰가 낮음
- 에코세대는 사생활 침해, 실업과 빈곤, 주택난에 대해 위험을 다른 세대에 비해 크게 인지함
- 삶의 대한 만족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에코세대가(5.85점)가 베이비붐 세대(5.65점)보다 높게 나타남
- 세대통합과 화합을 위해 가족에게 주어졌던 과도한 경제적 부담(자녀교육, 노인부양 등)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 정책 마련이 필요

*단위 : %, 점

*베이비붐 세대 (1955-1963년생), 에코 세대 (1979-1992년생)